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2009. 9. 7. ~ 11. 6.)

일자	보도자료명	담당부서명
9. 7.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석을 맞아, 밀린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해 주세요.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9. 8.	공정위,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거래지역 제한, 발행일 허위·기만표시	시장감시국 서비스입감시과
9. 9.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제정·시행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인전정보과
·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김영신 총남대 교수 임명	운영지원과
9. 10.	이동통신사 등 6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잘못 부과된 이동전화·인터넷·위성방송수신 요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2009년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9. 11.	공정위, 스펠지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조치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75억 원 부과, 4개 법인을 검찰 고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9. 14.	「선급금등 지연 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연 20%로 낮춘다.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9. 15.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에 막는다.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9. 16.	석유시장, 4대 정유사 과징체제가 고착화된 시장 구조 공정위,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9. 17.	자신신고센터 운영 등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 방안 마련 시행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올해 안에 등록하세요.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9. 18.	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서민생활에 악영향 주는 불법다단계 대대적 조사...엄중한 법집행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9. 20.	공정위 상임위원회에 장용석 변호사 임용	운영지원과
9. 21.	공정위, 추석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인전정보과
9. 22.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9. 23.	제약산업,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 공정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9. 24.	(주)한화 등 9개 계열사, 1,100여개 협력사와 상생협력·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9. 25.	6개 온라인유통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료회원 확보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체험 폼수 이제는 사라져야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인천세계도시축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9. 28.	레미콘 업계 카르텔 인가신청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9.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26개 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LNG충전소, 주택분양보증, 납세병마개 등 진입문턱 낮추고 경쟁을 촉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9. 30.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제동 시정조치와 함께 선택진료비 부당하게 지불한 소비자 피해구제 도모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10. 1.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등 적발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상반기 리콜실적 총 243건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관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인전정보과

일자	보도자료명	담당부서명
10. 5.	다단계판매 130만원 가격상한 기준 명확화 중개·위탁판매에서 가격상한기준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판매한 가격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0. 6.	2009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39억 원 신속하게 지급토록 조치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10. 7.	2009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지난 한 달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3개 증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8.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 불허 결정 부산지역 면세점시장의 독점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차단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
·	공정위,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10. 13.	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연수 개도국에 대한 정책교육을 정책수출의 기회로 삼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10. 14.	롯데정보통신(주)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지급 보증하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	공정위, 카르텔 예방을 위한 '카르텔업무설명회' 개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10. 15.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10월회의 참석 OECD에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논의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	LS전선 등 7개 계열사, 1,500여개 협력사와 튼튼한 상생협력 케이블 연결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10. 19.	'시장상황점검 비상 TF' 1차 회의 개최 자동차 정비업에서의 수리비 과다 청구, 소비자 등의 없는 임의수리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마련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제분석과
10. 20.	20개 연예기획사 대상 '연예인 전속계약 시정' 이행점검 결과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의 불공정조항 수정·삭제됐다.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회의 제도 도입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10. 21.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지보수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10. 23.	200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26.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	(주)아이월드계약의 한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제재 한약제약품 144원을 공급할 경우 100원만 수금, 44원은 수금할인	서울사무소 경쟁과
10. 27.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이(주)에 시정명령 공인 영어시험 토셀(TOSEL) 광고...알고 보니 공인받지 않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	200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등 주요정보사항 공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0. 28.	2009년 공정거래법상 자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지난 1년간 자주회사 23개 증가, 평균 부채비율은 46.4%로 건설한 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29.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3차 이행 평가결과 발표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9개 대기업 협력사 지원효과 총 5,658억 원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10. 30.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수수료 담합인상 제재 6년만에 걸친 수수료 담합업체들에 대해 총 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11. 2.	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 경품·저가납품 등 불공정행위 여전 현장조사와 제재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계획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11. 3.	4개 음료업체의 대형마트 등 판매가격 제한행위 시정 음료업체들 유통업체간 가격경쟁 제한하고 가격하락 억제한 행위 제동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11. 4.	공정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아시아 13개국 참가 한국 공정위,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11. 5.	서면약정 없이 반품·판촉사원파견 받은 (주)하이마트 시정조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	2009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1. 6.	가구제조업 등 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 마련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